

'89 양돈이슈

농축산물 수입과 양돈산업의 나아갈 길



이 우 재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1. 머리말

'80년대를 마감하는 '89년은 한국농업의 앞날을 결정할 중요한 조치와 사건으로 점철된 한 해였다.

4월 8일 발표된 「'89~'91 수입자유화 예시계획과 이에 따른 보완대책」(이하 “계획”)과 4월 28일 발표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이하 “대책”), 10월 27일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BOP(국제수지)위원회 결정에 의한 '97년말까지의 농축산물 전면 수입개방, 10월 25

일 국회에 제출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안)」 및 「농어촌공사설립 및 농지기금 설치법(안)」 등이 그것이다.

이에 맞선 2·13 여의도 농민대집회, 11월 15일의 ‘쌀값 보장 및 전량수매 쟁취 전국민대회’, 11월 28일로 예정된 ‘농축산물 수입저지 및 제값받기 전국농민대회’ 등 농민들의 조직적 저항 역시 광범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농축산물 수입정책을 구조적으로 완결지으면서 농축산업을 파멸로 몰아넣고 있는 “계획”과 “대책”을 중심으로 정부정책의 허구성과 반농민성을 폭로하고, 이 와중에서 양돈산업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2. “계획”과 “대책”의 내용과 문제점

먼저 4·8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을 살펴보자.

“계획”에 의하면 '89년부터 '91년까지 '89년 82개 품목, '90년 76개 품목, '91년 85개 품목 등 총 243개 품목을 수입자유화하여 자유화율을 '89년 3월 현재 71.9%에서 '91년 84.9%로 끌어올

리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보완대책으로 옥수수가루·유채 등은 차액보상을, 황도·양조용 포도 등은 생산조정보상을, 바나나·파인애플 등은 작목 전환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미 여러 글에서 “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논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간단히 정리하면 수입자유화는 한국농업을 파괴하는 반농민적·반민족적 행위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하고, 보완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차액보상, 생산조정보상, 작목전환지원 등은 수입자유화에 따른 농민들의 반발을 조금이라도 무마해 보겠다는 미봉책으로서, 간접피해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고 보상액 자체도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여기에 더욱 가공할 사실은 10월 27일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국제수지위원회에서 한국이 국제수지(BOP)조항(GATT협정 제18조 B항, 개발도상국에 한해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잠정적인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을 졸업하게 되고, 수입자유화 유예기간이 8년으로 결정됨에 따라 '97년까지 모든 농축산물을 전면 수입자유화 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돼지고기·쇠고기 등이 '91년말까지 수입 제한품목으로 묶여있는 전품목에 대한 수입개방압력이 강화될 것이 예상된다. 전품목을 수입자유화 하게 되면 한국농업은 그야말로 끝장인 것이다. 물론 일본이 오래전에 BOP조항을 졸업했음에도 정부와 농민이 단결하여 주력 23개 품목에 대해 계속 문을 닫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일본이 최근 이중 쌀 등을 다시 자유화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비추어 보더라도, 머지 않아 농축산물의 전면개방이라는 무시무시한 사태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농축

“

정부는 소위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여 농축산업을 파멸로 끌고가고 있다. 4월 28일 발표한 “대책”은 한마디로 농어촌발전의 전면개방을 전제로 농업구조를 수입개방 구조로 조정하여 농업을 외국에 완전히 종속시키고,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

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상황이 이럼에도 정부는 소위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여 농축산업을 파멸로 끌고가고 있다.

4월 28일 발표한 “대책”은 한마디로 농축산물물의 전면개방을 전제로 농업구조를 수입개방 구조로 조정하여 농업을 외국에 완전히 종속시키고,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내용의 핵심은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농축산물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현 180만호에 달하는 농가에 대해 살아남을 농가와 몰락할 농가로 나눠 50여만호의 농가를 전업농으로 집중 지원·육성하고, 나머지 농가는 농업으로부터 추방하여 전업(轉業)시키거나 겸업농화 또는 은퇴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때 쫓겨나는 농가들을 위해 반발무마용 대책으로 농촌공업화를 추진하고, 전업을 위한 직업훈련과 연금, 최저생계비 보장 등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규모확대(2000년의 평균 경지면적 1.67ha 전업농경지면적 2.7ha)를 위해 현행 소작제를 합법화 시키면서 '86년 제정 이후 농민들의 반발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농지임

대차관리법)을 시행하여 소위 농지유동화(流動化)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법으로 구체화 된 것이 10월 25일 국회에 상정된 위에서 본 두개의 법(안)이다.

두 법(안)의 골자를 보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안)」은 “대책”의 내용을 그대로 입법화 시키고, 이를 위해 “농어촌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전업농어가·농어촌후계자·영농조합법인 위탁경영회사를 지원·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농어촌공사 설립 및 농지관리기금 설치법(안)」역시 위법과 보완관계를 가지면서 “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농지에 관한 모든 사항을 농어촌공사가 전담하고, 농지매매·임대차 등에 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설치·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특별조치법(안)의 내용중에는 “자조금 적립 지원”, “국내산 농수산물 가공지원” 등 축산업과 밀접한 조항 등이 있지만, 양 법(안)은 농축산물의 전면 수입개방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적극 지지·철회시켜야 한다.

이상 '89년 정부의 농업정책을 중심으로 농축산물 수입정책이 어디까지 와 있고, 얼마나 심각한가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른 농축산물의 수입실태와 그 피해는 말할 것도 없이 심각하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실태와 피해 현황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단적으로 보아 돼지고기 통조림의 수입급증('87년 566톤, '88년 1,660톤, '89년 5월말 1,061톤)에서 보듯이 농수축산물 수입액이 '88년 43억2천5백만달러에서 '89년 7월말 현재 49억1천3백만 달러로 급증하고 있는데서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현실속에서 우리 8백만 농민은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양돈산업·양돈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3. 농축산물 수입과 양돈산업의 나아갈 길

위 “대책”에서 보면 양돈산업은 그래도 국제 경쟁력이 있는 수출전용사업으로 육성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자조금제도 등으로 직접적 정책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양돈산업이 상대적 안정 또는 우위에 있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

주지하다시피 농축산업이란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 한 품목의 수입은 직·간접적으로 다른 품목에 영향을 미쳐 수입개방→생산과잉→가격폭락의 소위 “수입공황”적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농축산물 수입은 전농민의 문제로 되는 것이다.

또한 BOP조항의 졸업으로 인해 당장 돼지고기 수입압력이 강화될 것이 분명하고, '97년까지는 수입개방된다고 하였을 때 지금부터 양돈인을 비롯 전농민이 위에서 살펴본 현 정책·계획을 철회시키지 못한다면 양돈산업 뿐만아니라 한국 농업전체의 장래는 암담한 것이다. 따라서 1차적으로 수입개방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양돈산업·양돈인이 살아남을 수 있다.

만에 하나 수입개방이 된다 하더라도 관세·비관세장벽(수입통관·검역제도의 강화 등)을 총동원하여 개방의 과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양돈인들이 뿔뿔 뭉쳐 통일된 목소리로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하고, 나아가 전농민이 단일한 대오로 현농업을 파국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의 농업정책, 농축산물 수입자유화정책에 맞서야 한다. 이처럼 수입으로 인한 타격을 방지한 가운데 생산성의 향상, 품질향상, 수출촉진과 내수개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때 양돈산업은 살아남을 수 있고, 나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